

#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규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336
----------	------

발의연월일 : 2019. 2. 28.

발 의 의 원 : 김규학 의원

김대현 의원

김원규 의원

박갑상 의원

이시복 의원

이영애 의원

## 1. 제안이유

오늘날 각 지자체 지역주민들은 자신들의 지역사회에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이른바 ‘넘비현상’이 팽배하고 있음에 따라, 대구시민들이 웰다잉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립공원묘지가 산재한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지천면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대구시의 화장시설 사용료에 대해 대구시 거주자요금을 적용시켜 지역주민들이 웰다잉할 수 있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지천면 소재지에 현재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소를 두고 사망일로부터 1년 이상 거주한 사망자의 화장시

설 사용료는 대구광역시 관내 거주자 요금을 적용한다.(안 제6조제5항)

###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불임

나. 관계법령 : 불임(「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다. 예산조치 : 관계부서와 협의 필요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 ⑤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지천면에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시설 사용료는 대구광역시 관내 거주자와 같은 요금을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 관 계 법 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약칭:장사법 )

[시행 2018. 6. 20] [법률 제15269호, 2017. 12. 19,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노인지원과) 044-202-3473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사(葬事)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 28., 2015. 12. 29.>

1. "매장"이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5.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6. "분묘"란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7.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8. "화장시설"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화장로 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9. "봉안시설"이란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묘
  -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인 봉안당
  - 다. 탑의 형태로 된 봉안탑
  - 라. 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담
10. 삭제 <2015. 1. 28.>

11. 삭제 <2015. 1. 28.>

12. 삭제 <2015. 1. 28.>

13. "자연장지(自然葬地)"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14.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한다.

15. "장사시설"이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및 제28조의2·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16.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자매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제3조(국가가 설치·운영하는 장사시설에 관한 적용 배제)**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장사시설(자연장지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 28.>

[제목개정 2015. 1. 28.]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설치의 방지를 위한 정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의 종합계

획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需給)에 관한 지역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역수급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지역수급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지역수급계획 중 지역간 장사시설의 수급조정, 장사시설의 공동설치 및 장사시설에 관한 지역간 갈등조정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수립의 기간·범위·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